

최근의 경기동향과 설비투자

韓 振 奎*

경기활성화를 지향한 단기적 경기부양책 「신경제 1백일 계획」이 6월 30일로 종료되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성과에 관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 계획이 짧은 기간동안에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업계는 앞으로의 경기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변화, 특히 거시경제정책 변화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선부른 감이 있으며 본고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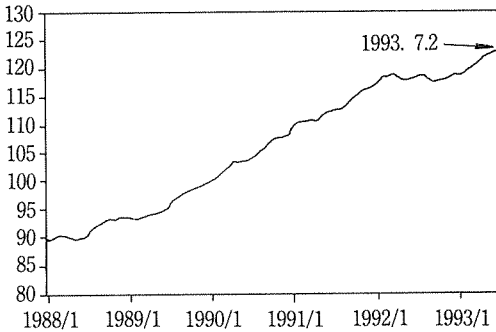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아직 전제조업에 걸친 보편적 현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업종의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되고 있어, 수출이 계속 활기를 떨 수만 있다면 경기의 회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회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설비투자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은 당초에 세워놓은 설비투자의 집행을 망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업종별 경기동향을 간략히 분석한 후 지난 6월말 총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설비투자의 동향과 전망, 설비투자의 부진이유 및 설비투자 진작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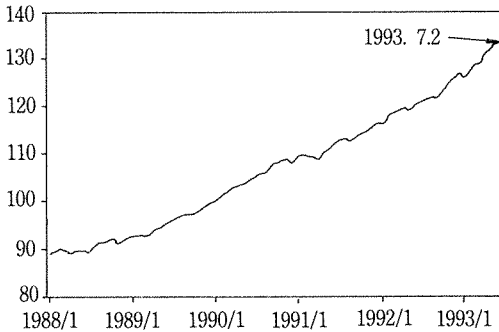
1.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될 듯

비수기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6월의 실물 경제 동향지수는 전월대비 0.6%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2~3개월의 경기를 예고하는 전망지수 역시 0.5%가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경기회복의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경기동향은 생산 출하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그림 1) KIET 실물경기 동향지수 추이



(그림 2) KIET 실물경기 전망지수 추이

및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회복기의 특징을 보이고는 있으나, 업종별 편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7월초에 실시한 업종별 실사결과에 의하면 중화학공업의 경기호전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부 경공업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내수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볼 때 가정용 전자산업과 전자부품제조업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정용 전자산업은 엔고가 지속되면서 일본 및 EC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냉장고 및 세탁기에 대한

내수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단란주점 허가에 따른 음향기기류의 내수증가도 호황세 유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전자산업중에서도 설비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용 전자부문의 경기는 가전부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반기계류부문의 경기 역시 호황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의 구조자금을 타기 위한 가수요가 일부 발생했고, 일부 업체의 트랙터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철강 및 비철금속 제조업 등 소재관련부문의 경기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호경기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산업 등 수요부문의 경기회복으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타이어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쌍용, 대우, 기아 등 업체들의 생산, 수출 및 출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손실분이 40~50%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타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기회복세를 시현하고 있다. 현재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조기에 해결될 수만 있다면 자동차산업은 본격적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학공업부문이 이처럼 비교적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경공업부문의 경기회복세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EC 등 선진국의 성탄절 및 추수감사절 수요에 대비하고 있는 직물·의류제조업의 경기는 다소 나아지고 있다. 직물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이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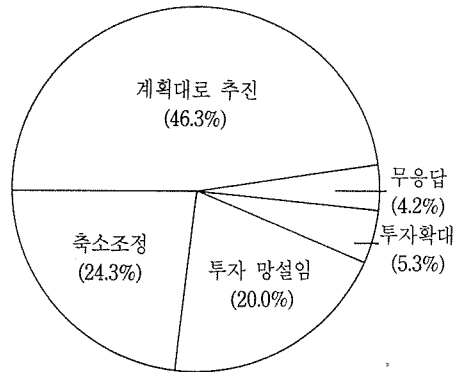
단되었던 중국특수가 회복되면서 경기호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원화환율의 상승도 수출감소세 둔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신발제조업의 경기는 수출감소와 공급과잉,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내수부진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수의 구성항목중 투자의 증가율은 아직도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항목중 선박을 제외한 기계수주는 금년에 들어서면서 감소폭이 줄어들다 4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전동차,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의 수주만 활발할뿐 민간부문의 수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자가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따른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본격적 투자증가 없이 설비투자 증가가 늘어날 수는 없으며 경기회복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은 자명해진다.

2. 경기회복 지연이 투자부진 야기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금년 상반기의 설비투자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의 상반기 투자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작년으로 일부 장치형 업종의 설비투자가 종결된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의 경기에 대해 불안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문결과를 볼 때 전체 응답기업의 47%는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초보다 투자를 축소조정하거나, 계획은 유지하고 있되 현재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도 44%에 달하고 있다. 투자계획을 축소조정하거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



(그림 3)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

들중 절반 이상은 그 주된 이유로서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국내수요가 부진함을 들고 있어 경기 부진과 설비투자 부진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중 특징적인 사실의 하나는 외부자금 조달난 및 내부자금 부족과 같은 전통적 설비투자 부진요인들이 2차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금리를 투자 부진의 이유로 지적한 기업들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이거나 새 정부가 추진해온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성과로도 지적되고 있다. 즉,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자금난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금리 역시 하향안정세를 보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응답기업들은 「신경제 1백일 계획」에 포함된 제반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들중 운전자금 대출기간 및 한도규제 완화, 신용보증한도 확대, 담보취득제한의 완화, 상업어음 할인한도 폐지 등이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운전자금의 대출기간과 한도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중 56.8%가 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경제 1백일

계획」에 포함된 조치중 사모사채 인수재원 및 인수규모의 제한 폐지, 외화증권발행자 요건 완화, 사채보증·인수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시책들은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기불투명과 자금난 이외의 요인으로는 수출수요 부진이 설비투자 부진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전체응답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유망품목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소수에 그쳤으나 중소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년여전만 해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인력, 입지,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과 최근의 사정활동 등은 극소수가 지적했을뿐이다.

기업규모별 응답행태를 볼 때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자금의 부족을 지적한 정도가 대기업보다 크게 높았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수요 부진을 지적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이같이 수요 부진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응답기업들은 취급품목의 경쟁력 저하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 업계 전체가 경쟁력 저하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 산업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사분규 등에 의한 경제전체의 불안이 지적되었고 수출수요의 부진을 지적한 기업군에서는 경쟁국에 의한 시장상실이 지적되었다.

설비투자 부진의 이유로서 경제정책의 불투명을 지적한 소수의 기업군에서는 산업지원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선진국의 통상

압력 등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제도를 국제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산업지원의 급속한 축소를 우려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밖에 극소수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대기업군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고, 중소기업쪽에서는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업종전문화정책 등이 지적되었다. 업종전문화정책 및 불공정거래 규제강화를 지적한 중소기업들은 이미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표 1〉 설비투자의 부진 이유

(단위: %)

구 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경기전망 불투명	56.5	61.3	50.0
국내수요 부진	55.6	64.0	45.0
외부자금 조달난	34.8	30.8	40.0
내부자금 부족	32.6	19.2	50.0
수출수요 부진	30.4	34.6	25.0
정부 경제정책 불투명	23.9	30.8	15.0
유망품목개발 부족	19.6	15.4	25.0
고금리	10.9	11.5	10.0
인력, 입지, 원자재 조달난	6.5	3.9	10.0
사정활동 등 정치적 불안	4.3	7.7	0

주: ① 각 수치는 설비투자의 부진 이유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10문항중 3문항을 선택했을 때 각 문항에 전체 기업들이 응답한 비중임.

② 본표는 설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조정하거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하반기 설비투자 활기 예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회복속도의 지연(또는 회복강도의 미흡)과 설비투자 부진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경기회복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하반기 설비투자의 원활화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본격적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계획을 기준으로 볼 때 설문대상기업

들은 지난해 평균 1,084억원 수준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대폭 늘어나 금년도중 전년대비 7.2%가 증가한 1,162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설비투자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설문대상기업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공공기업이 포함된 결과로 파악된다.

자산형태별로 본 금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작년에 비해 보다 건실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차량 등 운반구에 대한 투자는 27%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총투자의 2/3에 달하는 기계·장치류에 대한 투자도 6.6%의 비교적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는 반대로 토지·건물 등에 대한 투자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따라서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투자재원의 조달측면에서는 간접금융과 내부자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작년보다 무려 23.5%,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18.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들어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식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증

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회사채를 통한 설비투자자금 조달은 총자금수요의 15%선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 차입, 리스 및 사채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45.3~ -14.3%의 범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총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외자조달은 큰 폭으로 늘어나리라는 점이다. 전체 응답기업들은 작년보다 무려 121.7%나 증가한 업체당 평균 180억원의 투자자금을 외자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총재원에서 외자조달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의 두배 수준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물론 이같은 설문조사는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회에 걸쳐 별개의 기관들이 행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곤 했다는 점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즉, 3월 중순에 경제기획원이 100대 대기업에 대해, 또 상공부가 4월 초에 83개 제조업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년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9.4%와 7.5% 늘어날

〈표 2〉 자산형태별 투자동향 및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1992	1993	증가율
총설비투자	1084.4(100.0)	1162.3(100.0)	7.2
토지·건물	200.1(18.5)	205.8(17.7)	2.8
기계·장치	681.3(62.8)	726.0(66.9)	6.6
선박·차량·운반구	57.9(5.3)	73.6(6.8)	27.1
기 타	145.1(13.4)	156.9(14.5)	8.1

주: 응답 기업 설비투자액(계획)의 평균임.

〈표 3〉 설비자금 조달방식

(단위: 억원, %)

구 분	1992	1993	증감률
총설비투자	1084.4(100.0)	1162.3(100.0)	
주 식	31.0(2.9)	38.3(3.3)	23.5
회사채	113.7(10.5)	135.1(11.6)	18.8
금융기관차입금	170.9(15.8)	145.8(12.5)	-14.7
외 자	81.2(7.5)	180.0(15.5)	121.7
리 스	29.3(2.7)	19.5(1.7)	-33.5
단자·보험·사채	100.1(9.2)	55.8(4.8)	-45.3
내부자금	558.2(51.5)	587.8(50.6)	5.3

주: 〈표 2〉와 같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금년 2월중 산업은행이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7.9%, 제조업에서는 4.6%의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어 각각 0.7%와 13.7%의 설비투자 감소를 예견한 작년의 설문결과와 좋은 대조를 이룬 바 있다.

4. 경제정책의 투명성 유지가 설비투자 확대의 첩경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경기가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향후 경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고 투자가 경기회복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유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의 거시정책기조가 적당하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4.2%), 적극적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업체와 물가·임금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기업의 비중이 각각 47.4%와 41.1%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거시정책기조에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설비투자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또는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들의 과반수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물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 제조업부문에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던 반면 건설업 및 기타부문에서는 경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정책은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설비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설문결과에서도 설비투자의 진작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유지와 시장기능을 중시한 경제운영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이후 취해지고 있는 경제정책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노력들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노력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기업들이 막연하게나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 또는 경제정책의 급변추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설문결과에서도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이러한 자세는 기업이 지난 세월의 경제정책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경제주체라는 점에도 기인하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성장지속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자세와 관련하여 '수요에 따른 투자조정'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투자를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자세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동태적 비교우위를 근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재원조달 측면에 있어서도 은행, 보험 등 간접금융에서 탈피하여 직접금융비 및 외자 등의 비중을 높이려는 최근의 노력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